

2011년 지방재정세미나

사회복지분야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체계개선

최종보고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학회

프 로 그 램

■ 제1일 : 4월 21일

14:30-15:00 등록 및 안내

15:00-15:50 개회식 (대공연장)

- 개 회 사 : 이상복(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환 영 사 : 이개호(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축 사 : 이주석(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축 사 :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기조연설 : 손희준(한국지방재정학회장)

15:50-17:20 제1-1분과 주제발표 및 토론 (대공연장)

- 사회 : 윤영진(계명대)
- 발표 : 이재원(부경대)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여건과 정부간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 토론 : 김의섭(한남대)
김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봉업(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양재승(전라남도 예산담당관)

제1-2분과 주제발표 및 토론 (소공연장)

- 사회 : 정용덕(서울대)
- 발표 :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일본의 삼위일체 분권개혁과 사회복지

- 토론 : 우명동(성신여대)
길종백(순천대)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준승(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17:20-17:50 휴식 및 진도군 환영행사-남도 국악행사 (대공연장)

18:00- 만찬 (만찬사 : 이동진(진도군수))

▣ 제2일 : 4월 22일

09:30-11:00 제2-1분과 주제발표 및 토론 (대공연장)

- 사회 : 윤석완(전북대)
- 발표 :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복지분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과제

- 토론 : 라휘문(성결대)
오병기(전남발전연구원)
변성완(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송명완(목포시 기획예산과장)

제2-2분과 주제발표 및 토론 (소공연장)

- 사회 : 염명배(충남대)
- 발표 : 박경돈(충주대)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 토론 : 한인섭(조선대)
오시영(순천대)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영일(대전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목 차

개 회 사 / 이상복(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i
환 영 사 / 이개호(전라남도 행정부지사)	ii
축 사 / 이주석(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iv
축 사 /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vi
기조연설 / 손희준(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청주대)	viii

<제1-1분과>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여건과 정부간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이재원(부경대)	1
토론문	37

<제1-2분과>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49
일본의 삼위일체 분권개혁과 사회복지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77
토론문	125

<제2-1분과>

복지분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과제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7
토론문	175

<제2-2분과>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박경돈(충주대)	207
토론문	229

개 회 사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11년 지방재정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국 각지에서 와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야별 과제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멀리까지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계국장님,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장님,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 그리고 전라남도 이개호 행정부지사님, 진도군 이동진 군수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급증과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 지방비 부담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사회복지분야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리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우리 공제회의 주관으로 1996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하는 전통 있는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회는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회원의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다양하고도 생생한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학계의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지방재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끝으로 보배로운 섬인 이곳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이와 같이 유익한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행사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도군 관계자 여러분과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장을 가득 메워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2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 상 복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개호입니다.

먼저 2011년 지방재정 세미나가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 진도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남도 방문, 진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 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상복 이사장님과 한국지방재정연구원 한표환 원장님, 한국지방재정학회 손희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님, 그리고 발제와 사회, 토론 등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재정 전문가 여러분, 각 시도, 시군구 재정분야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은 중앙부처나 민간기업의 재정운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공익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책임아래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지출을 행한다는 자율성과, 국가재정이라는 커다란 제도적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타율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운영에 소요되는 총 세출 중 자체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세입은 국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들을 반영하여 운영되며, 국가의 지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미나의 대주제가 「사회복지분야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체계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예산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재정 세미나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지방재정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남도에서의 좋은 추억과 소중한 인연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21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 개 호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이주석 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1년 지방재정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재원 확충 등 여러 성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였고, 이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화력발전예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달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방세와 지방재정 분야의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연구원도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총 조세중 지방세 비중이 21%로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결과 의존재원의 비중이 2009년 38.5%, 2010년 39.5%, 2011년 41.1%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대부분 법정 의무경비인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하면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적 복지시책이 확대되면 지방비도 의무적으로 증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매년 10%대의 예산 증가율이 2010년 1%대로 둔화되고 2011년에는 0.8% 증가하는데 그친 점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 극복의 성과는 경기회복에 따른 교부세 증가 등 지방재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적극 협조한 지방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재정 운용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선제적인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개최되는 지방재정세미나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전문가와 학자, 실무자 등이 함께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오늘날같은 자리가 자주 개최되어야 지방재정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와 지방의 재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전액 보전 대책, 지방소비세의 차질없는 인상, 레저세 확대와 신세원의 발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은 물론이고,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율 상향, 분권교부세 사업 개편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틀간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참석자 모두 이론적·실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세미나가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재정세미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2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이 주 석

축 사

민속음악과 미술의 고장이며, 우리나라 최서남단인 진도에서 개최되는 “지방재정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요즘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복지분야의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에 관한 것으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대표로서,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한국지방재정학회 손희준 회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상복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진도군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환영사를 해주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님, 축사를 해주신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동진 진도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를 합한 복지재정지출은 8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8%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5.7%씩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도 2010년도에 전체 예산 중 19%가 사회복지 예산이며,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강화로 인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 2005년도 이후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부담 과중,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차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은 지방의 당면 과제이며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정부, 학계 전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에 관한 좋은 대안을 찾아보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전문가와 멀리 진도까지 참석해 주신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 4.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 표 환

기 조 연 설

자율과 책임을 위한 지방재정 방향

손 희 준(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청주대)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이후 만 20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의 역사도 이제 성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과연 얼마나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의 성과는 상당하다고 자평해 봅니다. 물론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로 일부의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하였으나 이를 침소봉대하여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를 품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처사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담보해 줄 지방재정의 현실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2006년에 지방재정 규모 '1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내실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작년 7월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2008년부터 불어 닥친 세계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의 감세효과로 직접적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 엄청난 재정손실을 초래했고,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채무의 급증은 지방재정의 위기가 고스란히 지방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1991년 69%이던 것이 2011년 올해 51.9%로 17%나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아직도 8:2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의 눈치만 살피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대폭 축소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세출확대에만 매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중앙정부는 또다시 최근 지방세의 핵심인 취득세의 인하조치를 취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인하하기로 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무릅쓰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보전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것이기에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겨우 당정이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세

수감소를 지방채를 통해 보전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통해 모자란 세수를 충당하라는 것이며, 결국 지역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특하면 지방재정을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몇몇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편승하여 지방재정 역시 중앙재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분권과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노무현정부에 비해선 많이 후퇴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참여정부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해묵은 과제인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기대했던 원안대로 도입된 것도 아니며, 이러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배경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를 통한 분권 및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의 감세조치와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결정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추후 목적세의 통합에 따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가 국정목표를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으로 설정하여 많은 정책과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연결고리인 재정조정제도가 점점 복잡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재원의 획득출구가 다변화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집권화 경향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봉사과 인식은 희박해 지는 대신에 더욱 중앙부처에 대한 종속구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계화를 위한 지방화를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집권에서 분권으로 선회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의 지방정책과 지역발전전략이 중앙집권적이었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화 방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며,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적 토대를 제공할 지방재정체제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방재정에 대한 충분한 자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할 것입

니다. 결국 “자율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가 지속된다면 “무책임과 의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임을 중앙과 지방이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의 역할과 책무도 중차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재정 위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의 급증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재구조화와 지방의 기능 및 역할조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우리 학회가 이번에 “사회복지분야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도의 여유와 향기가 가득한 진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basic needs)를 충족시켜 주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선진국들마저 지방의 기능으로 이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언제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천명한 적이 있었었나요? 지금까지도 선진국과는 달리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복지와 사회보장을 이제 와서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마치 지방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이 국민과 지역주민을 볼모로 마치 영역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며 주민들과 함께 생활 자치를 영위해 나가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지기능과 사무를 지방이 맡았으면 당연히 이에 따른 재원이 이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 지방은 항상 재원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해 보며,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사무재배분에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근 가동되었지만, 초기부터 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견대립은 합의안의 도출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마치 일부 시군구의 통합과 자치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방안에 초점을 두다보면 근본적인 기능 재배분보다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커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과 입지가 계속 축소되어 국가이미지 실추 등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 역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광역과 기초간의 기능배분도 포함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은 지방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 지방은 결코 단순한 중앙의 대리인이나 심부름꾼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이며 경쟁상대임을 재인식해서 지방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초석임을 인지하고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을 통한 강력한 세원이양과 각 부처별 이기주의에 의한 영세하고 중복적인 국고보조금을 “(가칭)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포괄보조금화 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관점에서 요구되는 지방의 책임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은 스스로 ‘자기부담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탄력세율제도의 적극 활용 및 과표와 과세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의 확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재정운영에 수반되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의 적정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경비절감 노력, 효과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연계 운영 등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재정은 한정된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는 것이 지상과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갈등과 반목이 아닌 통합과 상호이해를 통해 진정한 상생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